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본격 경선 시작

더불어민주당 22일~4월3일 · 결선 투표 8일... 국민의당 26일~4월4일... 자유한국당 31일 최종 후보 확정

5월 9일 치뤄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후보자 경선이 투표, ARS, 순회 투표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국민, 당원, 권력 당원은 현장 투표와 ARS 중 본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현장 투표는 오는 22일 전국 250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북지역 투표장소는 전주시 완산구는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완주군은 봉동읍 사무소 2층 회의실이며 그 외 13개 지역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치러진다.

또한 오는 25~26일 이틀동안 호남권 ARS 투표가 지역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어 호남권 전국대의원들이 참가하는 순회투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 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마친다.

총청(27~28일)과 영남(29~30일), 수도권 강원제주(31일~4월1일)도 호남권과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경선을 마치게 된다. 4월 2일 2차 선거인단 투표와 3일 수도권 강원도 순회 투표일을 끝으로 민주당 경선을 마치게 된다.

4월 3일 누적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면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만 만약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 8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등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도 26일 전주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총 8개 투표소에서 현장투표가 실시된다.



토론에 나선 유승민과 남경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2017 바른정당 후보자 경선토론'에 참석한 유승민(왼쪽), 남경필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타 정당과 달리 호남을 한 권역으로 묶지 않고 전북권역 투표일정을 별도로 배정했다는 것이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이는 '전북 FIRST', '전북 뭉 찾기'를 역설해 온 국민의당의 의지를 실천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전북권역 현장투표는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승패의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혁신 사업에 대한 확

고한 추진 의지와 전북중심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는 후보가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전북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최초로 완전한 국민경선을 채택했다. 최대한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의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며 "누구나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는 4월 4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우철,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김관용 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은, 오는 4명의 본격선 진출자를 확정하는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31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 기자

도의회 환복위, '공공의료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0일 현지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도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과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공공의료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복지위원들은 우선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는 전북대 병원을 찾아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시스템과 위기상황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음압격리병상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자리를 옮겨 심장과 뇌혈관질환 환자를 위한 진단부터 치료, 재활,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진료체계의 운영실태를 살펴봤다.

이날 최훈열 위원장은 "도민 의료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건강지킴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은 과거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북대병원내에 설치됐다.

현재 음압병상 5실 8병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11년 4월부터 촉각을 다루는 심뇌혈관 환자의 24시간 응급진료 및 재활치료를 위한 국가 지정 병원으로서 원광대병원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인재용 기자

文측, 안희정에 '장외반격'

"盧 같이 모신 동지가 억지 흡집"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전두환 표창' 논란에 대한 반격에 돌입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했거나,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 인사들이 일제히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성토했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지자가 쓴 글을 옮겨와 "수십 년간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오면서 퍼부어지던 저주가 오로지 문재인만을 향하고 있다"며 "문재인이 그렇게 온 몸으로 자들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는 동안 안희정, 이재명은 편하게 대선 주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맹비난했다.

특보단장인 김태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안 지사를 향한 공개서한을 올려 "내가 아는 안희정이다. 너무나 어색한 웃음 입은 동지이자 친구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병으로 군복무 충실해서 받았던 부대장 표창장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가 안희정의 정치가 아니냐. 민주당 운동의 선배이자 동지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모셨던 분에게 사살관계가 명확한 것을 두고 억지 흡집을 낼 일도 아니냐"며 "안희정과 문재인 다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가 될 분으로 저로서는 무척이나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지만 하다고 안 지사를 성토했다."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인 전병헌 전 의원은 "비판도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더더욱 전두환이 4년 뒤 쿠데타 수괴가 될 줄 사병이 어떻게 알았느냐.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전 의원 또한 "문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색깔론자들로부터 자신의 안보관을 의심받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그 발언을 했을 것이다. 군 생활 잘해서 표창까지 받았으니, 그런 의심일랑 거두라는 뜻"이라며 "그걸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이 그대 '전두환한테 표창 받은 걸 자랑하냐'고 공격하느냐. 더구나 '캠프와 호남 민중들께 사과하라'며 지역감정까지 부추기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9일 자신의 안보관을 피력하기 위해 한 예로 전두환 당시 여단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안희정 지사 측이 "문 전 대표가 군 복무 시절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을 받은 것을 자랑하듯 밝혔는데 그런 표창장은 버리는 게 맞다"며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뉴스

"발령 대기교사 증가는 교원정원 축소 탓 커"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에 대책마련 촉구... 학력미달 학생수수 대회 출전 제한엔 우려의 뜻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교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탓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등 발령 대기교사가 5,000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310명, 1,035명으로 발령 대기 교사가 많았다. 전북은 289명으로 이 중 95% 가량이 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육감은 "대기발령교사가 늘어난 원인으로 명퇴자가 줄었다는니 휴직 신청자

가 줄었다는니 하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교원정원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큰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합격자나 교육대학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수요보다 좀 더 넉넉히 선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으로서의 빠른 시일 안에 발령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다"면서 "교육부에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 후 3년이 지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 3년 조항"으로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내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귀책사유가 합격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합격을 발표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선수들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려는 교육계의 흐름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력 저하에 대한 고민으로 이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탁상행

정식의 대책이 아이들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생선수가 공부하지 않고 운동하게 만든 것은 우리 어른들이다. 학교가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만들었고 교육부는 방조했다. 학부모들의 욕심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희생된 건 아이들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선수 가운데 평생 직업의 길로 가는 비율은 10~20% 정도 될 것이다. 그 길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이 가는 길을 가도록 해주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는 아이도 분명히 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운동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또다른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자'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